

사회

국민생활

■ 가계동향

가계의 실질소득과 소득분배지표가 2년여 만에 모두 개선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힘이 실리게 됐다. 2017년 4분기 가계소득은 월평균 444만5천원으로 2016년 동기 대비 3.1% 늘었다.

명목소득이 늘면서 실질소득도 1.6% 증가했다. 소비자물가 상승을 제외한 실질소득은 2015년 4분기 이후 8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다가 9분기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

근로소득은 293만2천원으로 0.9%, 사업소득은 94만3천원으로 8.5%, 재산소득은 1만8천원으로 9.5% 증가했다. 연금·실업급여 등 생산 활동을 하지 않아도 정부 등으로부터 지원받는 수입을 뜻하는 이전소득도 10.1% 증가했다.

연간 비소비 지출은 가구당 월평균 86만7천원으로 2016년 보다 12.5% 늘었다. 근로소득세·사업소득세 등 정기적으로 내는 경상조세는 13만4천원(2.1%) 증가했으나 양도소득세·부동산 취득·등록세 등 비경상조세는 66% 감소했다.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지출은 13만8천원(3.7%) 증가했고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기여금 지출도 13만6천원(3.8%) 늘었다.

경조비·교제비 등 가구 간 이전 지출은 25만1천원(46.7%), 이자비용은 8만7천원(7.7%) 증가했다. 가구당 월평균 처분가능

소득(가계소득-비소비지출)은 357만8천원으로 2016년 4분기 보다 1% 늘었다.

■ 소득분배

소득 분배 상황은 8분기 만에 개선됐다. 작년 4분기 전국 가구 기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전국 2인 이상 가구)은 4.61배로 2016년 4분기(4.63배)보다 0.02배 하락했다. 처분가능소득은 소득에서 세금이나 사회보장부담금 등 비소비 지출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소비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을 의미한다.

5분위 배율은 5분위 계층(최상위 20%)의 평균소득을 1분위 계층(최하위 20%)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수치가 클수록 소득분배가 불균등한 것으로 해석된다.

2017년 소득 5분위 배율은 2016년 1분기부터 2017년 3분기까지 7분기 연속 증가(소득분배 악화)하다 2017년 4분기 감소(소득분배 개선)세로 전환됐다. 1분기 5.35배(0.33 상승), 2분기 4.73배(0.22 상승), 3분기 5.18배(0.37 상승)를 각각 기록했다.

■ 소비자물가

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2016년 대비 1.9% 올랐다. 농산물 및 석유류제외지수는 1.5%,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지수는 1.5%, 생활물가지수는 2.5%, 신선식품지수는 6.2% 상승했다.

(전년비,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소비자물가지수	4.0	2.2	1.3	1.3	0.7	1	1.9
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	3.2	1.7	1.6	2	2.2	1.6	1.5
식료품및에너지제외지수	2.6	1.6	1.5	1.7	2.4	1.9	1.5
생활물가지수	4.4	1.7	0.7	0.8	-0.2	0.7	2.5
신선식품지수	6.3	5.9	-1.3	-9.3	2.1	6.5	6.2

지출목적별로는 식료품·비주류음료(3.4%), 교통(3.6%), 음식·숙박(2.4%), 주택·수도·전기·연료(1.7%) 등 12개 부문 모두 상승했다.

(%, %p)

구분	품목수	가중치	전년대비 등락률					기여도
			2013	2014	2015	2016	2017	
< 총 지수 >	460	1,000.00	1.3	1.3	0.7	1.0	1.9	1.94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133	137.7	0.9	0.3	1.6	2.3	3.4	0.47
주류 및 담배	7	15.5	1.7	-0.1	50.1	0.7	1.5	0.02
의류 및 신발	30	61.4	2.9	4.0	1.3	1.8	1.1	0.07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	16	170.2	3.5	2.9	-0.6	-0.8	1.7	0.28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49	41.7	0.3	2.1	2.6	1.6	1.1	0.05
보 건	32	68.7	0.4	0.7	1.3	1.0	0.9	0.06
교 통	32	111	-0.5	-1.6	-7.8	-2.2	3.6	0.38
통 신	6	54.8	-0.1	-0.1	-0.2	0.1	0.3	0.02
오락 및 문화	55	57.2	1.0	0.4	-0.5	1.8	0.1	0.00
교 육	20	97	1.2	1.5	1.7	1.6	1.1	0.11
음식 및 숙박	44	129.4	1.6	1.4	2.3	2.5	2.4	0.32
기타 상품 및 서비스	36	55.4	0.5	3.1	2.7	3.4	2.8	0.16

품목성질별로 보면 상품은 1.9%, 서비스는 2% 올랐다. 상품 중 농축수산물물은 5.5%, 공업제품은 석유류 가격 상승으로 1.4% 올랐고 전기·수도·가스는 전기료가 내리면서 1.4% 하락했다. 서비스 중 집세는 1.6%, 공공서비스는 1%, 개인서비스는 2.5% 각각 상승했다.

(%, %p)

구분	품목수	가중치	전년대비 등락률					기여도
			2013	2014	2015	2016	2017	
< 총 지수 >	460	1000	1.3	1.3	0.7	1.0	1.9	1.94
상 품	308	448.1	1.0	0.9	-0.7	-0.6	1.9	0.85
(농축수산물)	73	77.9	-0.6	-2.7	2.0	3.8	5.5	0.44
(공업제품)	231	325.8	0.9	1.3	-0.2	-0.5	1.4	0.46
(전기·수도·가스)	4	44.4	4.5	3.9	-7.4	-9.2	-1.4	-0.06
서 비 스	152	551.9	1.5	1.6	1.8	2.3	2.0	1.09
(집 세)	2	93.2	2.7	2.3	2.5	1.9	1.6	0.15
(공공서비스)	32	145.1	0.7	0.7	1.2	1.5	1.0	0.14
(개인서비스)	118	313.6	1.6	1.7	1.9	2.7	2.5	0.8

■ 부동산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7년 주택 매매 거래량' 자료를 보면, 연간 주택 매매 거래량은 94만7천104건으로 2016년 대비 10.1%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1.8% 줄었고 수도권이 11.3%, 지방이 8.6% 줄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11.3%, 연립·다세대는 7%, 단독·다가구는 8.6% 감소했다.

연간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167만4천222건으로 2016년 대비 1.1% 늘었다. 이 중 월세 비중은 42.5%로 0.8%포인트가 줄어 감소세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2.6%, 수도권 1.2% 증가했고,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 0.2%, 아파트 외 주택 1.9%가 각각 증가했다. 임차유형별로는 전세는 2.5% 증가, 월세는 0.6% 감소했다. 아파트의 월세 비중은 36.5%로 1.7% 감소했고, 아파트 외 주택은 47.7%로 2016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주택 매매가는 1.5%(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주택 포함) 올라 2016년(0.7% 상승)에 비해 높았다. 매매가는 전국적으로 상승했으나 부산과 제주 지역은 상승폭이 작았고 울산과 경남 지역은 하락했다.

전세가는 대구·광주·강원·전북·전남 지역만 소폭 상승했고 그 외 지역은 안정세를 보였다. 세종 지역 전세가는 아파트 공급 과잉으로 크게 하락했다. 하반기에 소폭 상승하긴 했으나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지속됐다.

전국 지가변동률은 평균 3.88% 상승해 2016년 2.7% 대비 1.18%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지가가 하락했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17개 시·도가 전반적으로 오른 가운데 세종, 부산, 제주, 대구, 서울 순으로 높게 상승했다.

수도권은 3.82% 상승했는데 서울이 4.32% 올라 2013년 9월부터 52개월 연속 소폭 상승한 반면 경기 3.45%, 인천 3.10%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지방은 세종이 7.02%로 가장 많이 올랐고 부산, 제주, 대구 등 6개 시도는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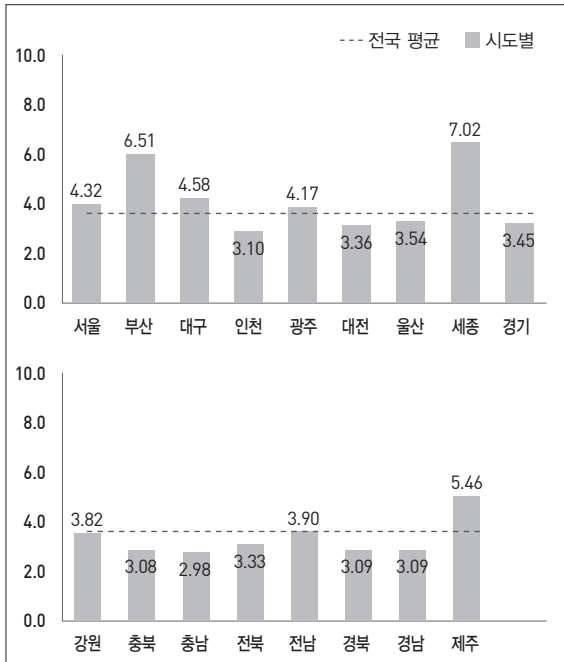
지가상승률 상·하위 지역(시군구 단위)을 살펴보면, 부산 해운대구(9.05%)가 LCT사업, 센텀2지구 산업단지 조성,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개발 등의 호재로 가장 크게 상승했고 뒤를 이어 부산 수영구(7.76%)가 남천 및 광안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진척과 해안가 상업용지 수모로 올랐다. 반면, 울산 동구(-1.86%)는 시군구 중 유일하게 하락했다.

용도지역별로는 모든 용도지역이 상승한 가운데 주거지역(4.33%), 계획관리지역(3.80%), 상업지역(3.80%) 순으로 오름세를 나타냈다. 모든 이용 상황별 토지에서 지가가 상승했는데 주거용(4.22%), 상업용지(3.88%), 전(3.63%) 순으로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연간 전체 토지 거래량은 총 331.5만 필지로 2016년 대비 10.7%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세종(44.9%), 인천(24.1%), 광주(20.9%) 순으로 증가했고 제주(-6.8%)는 시도 중 유일하게 감소했다.

건축물 부속 토지를 제외한 순수 토지 거래량은 총 116.1만 필지로 4.4%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세종(32.2%), 인천(17.4%), 전북(12.7%) 순으로 증가했고 제주(-17.8%), 경남(-4.4%)은 감소했다.

2017년 연간 자기변동률(%)



■ 주택건설 실적

전국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은 65만3천 호로, 역대 최고치였던 2015년 76만5천 호와 2016년 72만6천 호 대비 낮은 수준이나 최근 5년 평균 60만7천 호에 비해서는 7.7% 증가했다. 국토연구원에 의하면 2018년은 입주 물량 확대와 '8·2 대책' 등 정책적 요인으로 주택거래가 위축되면서 인허가 물량이 50만 호 내외의 장기평균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32만1천402호로 2016년 대비 5.8% 감소했으나 최근 5년 평균 대비 10.5% 증가했다. 서울은 51.4%, 인천은 2.3% 증가했고 경기는 24% 감소, 지방은 33만2천 호로 13.7% 감소했다.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는 46만8천116호로 2016년 대비 7.6% 감소했으나 5년 평균 40만9천 호에 비해서는 14.5% 증가했다. 아파트 외 주택은 18만5천325호로 15.5% 감소했고 최근 5년 평균 19만8천 호에 비해서도 6.3% 감소했다.

건설주체별로는 공공주택이 7만6천629호로 2016년 대비 1.1% 증가했지만 최근 5년 평균 대비로는 5.3% 감소했다. 민간주택은 57만6천812호로 11.3% 감소했지만 최근 5년 평균 대비로는 9.7% 증가했다. 규모별로 소형은 3.5% 증가, 중형과 대형은 각각 18.5%, 10% 감소했으며 85㎡ 이하 비중은 80.5%를 차지했다.

■ 인구가동

인구가동자 수는 715만4천 명으로 2016년 대비 22만4천 명(3%) 감소했으며 1979년 732만4천 명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인구가동률(인구 백 명당 이동자 수)은 14%로 0.5%포인트 감

소했고 시도 내 이동률은 9.3%, 시도 간 이동률은 4.7% 감소해 2016년 대비 각각 0.4%포인트, 0.1%포인트 줄었다. 연령별 이동률은 20대(21.4%)와 30대(21%)가 가장 높았다. 이동자의 중위 연령은 34세로 2016년 대비 0.1세 증가했다. 성별 이동률은 남자 14.3%, 여자 13.7%로 남자가 여자보다 0.6%포인트 높았다.

전출자보다 전입자가 많아 순유입이 발생한 시도는 경기 11만6천 명, 세종 3만5천 명 등 7개 시도였고 전입자보다 전출자가 많은 순유출 시도는 서울 -9만8천 명, 부산 -2만8천 명, 대전 -1만6천 명 등 10개 시도였다. 서울 전입자의 51.6%는 경기에서, 서울 전출자의 62.0%는 경기로 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기 전입자의 54.4%는 서울에서 이동했으며 경기 전출자의 45.7%는 서울로 빠져나갔다. 경기·세종·충남·제주는 전 연령층에서 순유입이 발생했고 순유출은 부산이 전 연령층에서, 대전·울산은 80세 미만 전 연령층에서, 대구는 10세 미만 및 8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발생했다.

4개 권역 중 수도권은 10~20대 순유입 1만6천 명을 기록해 2012년 이후 5년 만에 순유입으로 전환됐다. 중부권은 2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순유입 4만2천 명을 기록했다. 호남권과 영남권은 순유출을 나타냈다. 순유입률이 높은 시군구는 대구 달성군 10.3%, 경기 하남시 9.3% 등이며 순유출률이 높은 시군구는 경기 과천시 -10.6%, 대구 서구 -3.6% 등이었다.

인구가동 사유는 주택 41.3%, 가족 23.4%, 직업 20.5% 순이었다. 시도 내 이동의 주된 사유는 주택(50.2%)이 가장 많고, 시도 간 이동사유는 직업(33.2%)이 가장 많았다. 순유입 주요 사유는 세종·경기가 주택, 충남·제주는 직업이었다. 순유출 주요 사유는 서울·부산·대전이 주택, 울산은 직업이었다.

■ 건강보험

의료보장 인구는 5천243만 명으로, 이 중 건강보험 적용 인구가 5천94만 명(97.2%),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149만 명(2.8%)을 차지했다. 직장건강보험 적용 인구는 3천690만 명(72.4%)으로 2016년 대비 0.2%포인트 증가했고 직장가입자 1인당 평균 부양가족 수는 1.19명으로 나타났다. 지역건강보험 적용 인구는 1천404만 명으로 0.3% 줄었다. 지역가입자 1인당 평균 부양가족 수는 0.96명으로 감소했고 65세 이상 건강보험 적용 인구는 681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13.4%를 차지했다.

건강보험료 부과총액은 50조4천168억원으로 2016년보다 5.8% 증가해 처음으로 50조원을 넘었다. 직장보험료는 42조4천486억원으로 전체 부과액의 84.2%를 차지했고 지역보험료는 7조9천682억원이었다. 가구(가입자)당 월평균 보험료는 10만1천178원, 직장가입자의 경우 가구당 월평균 10만7천449원, 지역 가구의 경우 월평균 8만7천458원의 보험료를 부담했고 1인당 월평균 보험료는 4만8천152원이었다.

건강보험가입자 중 직장가입자의 비중은 2012년 64.1%에서 2017년 68.4%로 4.3%포인트 증가했고 보험료 부과금액 중 직장가입자 구성비도 2012년 80.7%에서 2017년 84.2%로 3.5%포인트 증가했다. 지역가입자는 가입자 비중(-4.3%포인트)과 보험료 부과금액 구성비(-3.5%포인트) 모두 감소했다.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증가했다.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69조3천352억원으로 7.4% 증가했다.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39.9%인 27조6천533억원으로 2016년보다 10.5% 증가했고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2%포인트 증가했다. 65세 이상 1인당 진료비는 8만1천28원으로 약 6.1% 증가했다. 전체 1인당 월평균 입·내원 일수는 1.69일로 0.01일 증가했다.

공단이 지출한 보험급여비는 54조6천249억원으로 2016년 대비 7.3% 증가했다. 보험급여비의 97.6%를 차지하는 요양급여비·건강검진비 등 현물급여비는 53조3천217억원으로 7.2% 늘었고 요양비·임신·출산 진료비 등 현금급여비는 1조3천32억원으로 10% 늘었다. 보험급여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양급여비는 51조8천225억원으로 7.2% 증가했다.

요양기관은 9만1천545개로 상급종합병원 43개, 종합병원 301개, 병원 1천466개, 요양병원 1천529개, 의원 3만938개를 비롯해 치과 병·의원 1만7천607개, 한방 병·의원 1만4천423개, 조산원 26개, 보건기관 3천475개, 약국 2만2천737개였다. 특히 한방병원은 2016년 대비 10.6% 증가했고, 요양병원은 7.1%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8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18년 건강보험료율을 2.04% 인상하기로 했다. 이로써 2018년부터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6.12%에서 6.24%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79.6원에서 183.3원으로 인상된다. 복지부는 이번 인상이 8월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뒷받침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11월 6일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해 2018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0.83%포인트 올리고 급여비용(수가)을 평균 11.34% 인상하기로 확정했다. 2018년 수가 인상률은 장기요양 종사자의 인건비를 2018년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는 요인 등에 따른 것으로, 노인요양시설 9.87%, 노인공동생활가정 7.6% 등이 인상됐다.

수가 인상에 따른 급여비용 증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이용시 수급자가 부담하는 월 본인 부담이 3만60~3만5천160원 증가해 월 33만4천680~39만1천140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그러나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에 따른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 확대로 소득 수준에 따라 월 13만3천870~23만4천680원의 본인부담금을 물게 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중산층 이하 계층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완화됐다.

■ 국민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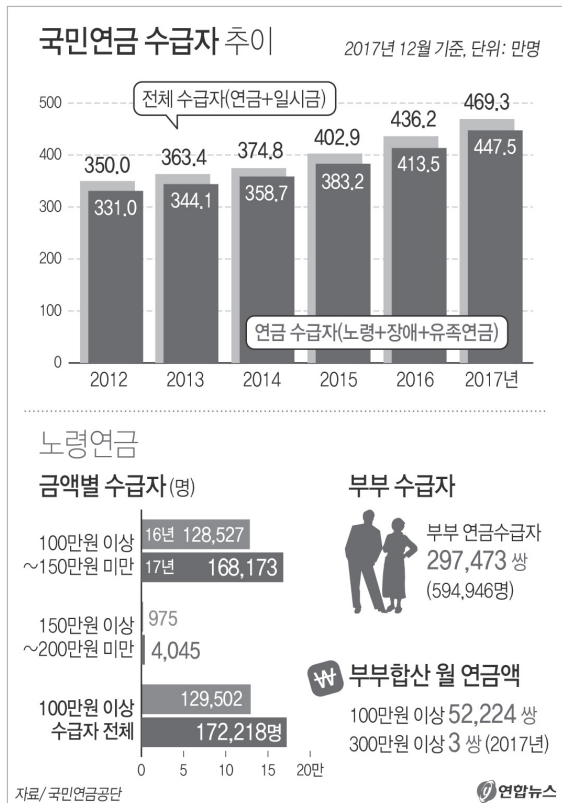
국민연금연구원의 2017년 국민연금 통계 자료에 의하면 국민연금 총가입자는 2천182만 명이다. 사업장가입자가 1천346만 명, 지역가입자가 769만 명,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가 각각 32만8천 명, 34만5천 명이다. 2016년 말 대비 사업장가입자는 26만7천 명(2.0%), 임의가입자는 3만1천 명(10.4%), 임의계속가입자는 6만2천 명(22.0%) 늘었고 지역가입자는 36만8천 명(4.6%) 줄어 전체 가입자는 약 8천 명(0.04%) 감소했다.

수급자는 469만 명으로 2016년보다 33만1천 명(7.6%) 증가했다. 노령·장애·유족 연금 수급자는 448만 명으로 34만 명(8.2%) 증가했고, 그중 노령연금 수급자는 371만 명으로 29만4천 명(8.6%) 증가했다. 일시금 수령자는 22만 명으로 1만 명(4.1%) 감소했다. 노령연금 월평균 지급액은 39만원, 최고지급

액은 199만원이었다.

2017년 12월 말 현재 기금운용(투자)금액은 527조1천억원으로 2016년 동기보다 38조2천억원(7.82%) 증가했고 금융부문에서 526조3천억원(99.8%)이 투자됐다. 이 중 채권에 296조8천억원(56.4%), 주식에 166조8천억원(31.7%), 대체투자에 61조원(11.6%)이 투자됐다.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은 7.26%(금액가중수익률 기준)를 기록했다. 금융부문 수익률 중 자산군별 수익률은 국내주식 25.88%, 해외주식 10.62%, 대체투자 4.56%, 국내채권 0.51%, 해외채권 0.14%를 보였다.



▲ 국민연금공단이 2017년 국민연금 지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금 수급자는 447만5천143명이고 매달 10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은 수급자가 17만2천명, 부부수급자도 30만 쌍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정부는 8월 10일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918~1920년)'을 발표하고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급여별·대상자별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추진하고 앞으로 3년 동안 비수급 빈곤층 등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소득 불평등 완화, 차별과 격차 해소를 통한 소득 주도 성장'의 밑거름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최초로 수립된 3개년 종합 계획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비수급 빈곤층에 최소한 1개 이상의 급여를 지원하고, 주거 안정성 제고를 위해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2017년 11월부터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2019년 1월부터는 수급자 가구 특성과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재산 하위 70%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2022년 1월부터는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도 여전히 남아 있는 비수급 빈곤층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사례 심사를 통한 수급권 부여, 긴급 의료비 지원 제도 등 촘촘한 보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앞으로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의 비수급 빈곤층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의무화해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수급자로 우선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초생활 급여별 보장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첫째, 의료급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과 연계해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주거급여는 2018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함께 주거급여 대상자를 202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45%로 확대하고,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나간다.

셋째, 교육급여는 2020년까지 최저생계비 중 최저교육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까지 지원수준을 인상한다.

넷째, 생계급여는 2015~2017년 지속적으로 선정기준 및 급여 수준을 인상했던 점을 감안해 이번 계획 기간에는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중심으로 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비수급 빈곤층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빈곤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2020년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 시에는 비수급 빈곤층 등 복지 사각지대 감소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를 토대로 비수급 빈곤층 등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2단계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정부는 8월 9일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낮추고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건강보험 혜택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으나 건강보험 보장률이 지난 10년간 60% 초반에 머물러 있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저소득층은 재난적 의료비 발생 등 위험에 더 크게 노출돼 있으나, 소득 대비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금액 비율은 고소득층보다 높아 이들에 대한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정부는 의료비 부담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30조6천억원을 투입해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보장성 강화 대책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미용·성형 등 일부를 제외하고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모든 비급여는 건강보험으로 편입된다. MRI·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는 모두 급여 또는 예비급여를 통해 급여화(2017~2022년)하고 미용·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경우에만 비급여로 남는다. 효과는 있으나 가격이 높아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비급여는 본인부담률을 30~90%까지 차등해 우선 예

비급여로 적용하고 3~5년 후 평가해 급여, 예비급여, 비급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2018년부터 선택진료는 완전히 폐지된다. 또 그동안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4인 이상 입원하는 다인실 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비급여 상급 병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2018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 병상도 대폭 확대된다. 수술 등으로 입원한 급성기 환자가 간병이 필요하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간호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 병상을 10만 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노인, 아동, 여성 등 경제·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필수 의료비의 부담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노인에 대해서는 치매 국가책임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치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밀 신경인지검사, MRI 등 고가 검사들을 급여화하고 중증 치매 환자(약 24만 명)는 산정 특례를 적용해 본인부담률을 대폭 인하(20~60% → 10%)한다. 노인 틀니·임플란트의 본인부담률도 50%에서 30%로 낮춰 치과 의료비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미래 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의 경감 적용 대상과 폭을 크게 확대한다. 총치 예방 및 치료 시 본인 부담 완화 등 아동의 의료비도 줄인다.

장애인 보조기 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시각장애인용 보장구 등에 대한 기준금액도 인상에 장애인 의료비 부담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간다. 또 경제적 능력을 감안해 적정수준의 의료비를 부담하도록 소득 하위 50%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액을 연 소득 10%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는 초기(2017~2018년)에 신규 재정의 56%를 집중 투입해 보장성 강화 효과가 초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 시행으로 국민 부담 의료비는 약 18% 감소(2015년 기준, 50만4천원 → 41만6천원)하고 비급여 부담도 64% 감소할 것으로 보고 연간 5백만원 이상 의료비 부담 환자는 약 66% 감소(39만천 명 → 13만2천 명), 저소득층(하위 5분위)은 95%까지 감소(12만3천 명 → 6천 명)할 것으로 기대했다.

■ 교육복지 정책의 방향과 과제

정부는 3월 8일 경제·사회분야 양극화 문제 해소 차원에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교육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내용을 담은 「교육복지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발표했다. 양극화로 인한 교육 격차 실태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교육부가 제시한 교육복지 정책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 교육기회를 보장 확대한다. 저소득층 유아의 취학기회 보장을 위해 적절한 원비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공공형 유치원을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공립유치원 원아 수용률이 낮은 대도시, 인구밀집 지역부터 희망 유치원에 대해 우선 지원한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항목 연계·조정, 소득조사 방식 일원화 등에 대해서도 사회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논의할 예정이다. 차상위 계층까지 수능 응시료를 면제하고 국가교육근로장학금 확대, 대학생 행복 기숙사 건립 등을 통해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교육비와 주거 부담을 완화한다.

둘째,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을 위해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을 연차적으로 확대한다. 또 특수학교 신설 시 수영장, 도서관 등을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고 지역사회의 협력에 기초한 신(新)특수학교 증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문화 지원을 위해 다문화 유치원을 17개 전체 시도 90개로 확대하고, 중도입국·외국인학생을 위해 다문화 예비학교를 160학급으로 증설하며, 모국어 멘토링도 2017년 서울부터 확대한다. 탈북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충 지원을 강화하고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진로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학부모를 위해 진로·진학 교육도 강화한다. 학생 수 감소로 열악해지는 농·산·어촌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탄력적 학구제를 통해 도시근교 농·산·어촌 학교의 적정 학생 수 유지를 지원한다.

셋째, 성장단계별 학습결손 예방을 내실화한다. 유아교육 내 실화를 위해 누리과정의 질을 제고하면서 학부모들의 돌봄 수요에 대응한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 활성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10% 이상인 학교는 두드림학교로 의무 지정하며, 미달 학생이 일부만 존재하는 학교에도 복합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지원하는 다중지원팀을 구성한다.

정부는 “날로 심화하는 경제·사회적 양극화에 대응해 모든 학생에게 기회와 희망을 주기 위한 교육 지원 정책은 정부 차원에서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라고 강조하고 “주어진 여건이 학생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을 넘어서 성공과 실패를 판가름 짓는 절대적인 요소가 되지 않고, 모든 학생이 함께 성장하고 희망을 키워나가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2017년 주거종합계획

정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7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발표했다. 주거종합계획이란 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급여 지원 등 그해에 정부가 추진할 주거 지원 계획을 종합한 것으로, 주거기본법의 제정(2015년 12월 시행)에 따라 2016년부터 시행했다.

2017년 주거종합계획은 맞춤형 주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행복주택 등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 주거복지 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 전세임대 물건을 편리하게 찾을 수 있는 서비스 지원 신설, 버팀목 대출자의 임대주택 중도금대출 추가 허용,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2013~2022년) 보완 계획 등의 신규 내용도 담겼다.

중점 추진과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공급방식 다양화 ▲뉴스테이 공급 확대와 다양화 ▲전·월세 등 주거비 지원 강화 등이다. 이 밖에도 주거복지의 구축 공고화,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주거환경 개선, 장기주거종합계획 수정 및 보완 등이 포함됐다.

■ 가상통화 긴급대책 마련

정부는 12월 13일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해 가상통화 투기과열과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행위 등

에 대한 정부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상화폐와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첫째, 정부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기과열 분위기에 편승한 가상통화 관련 범죄에 대해 단속과 처벌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다단계·유사수신 방식의 가상통화 투자금 모집, 기망에 의한 가상통화 판매행위, 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 등 불법거래, 가상통화를 통한 범죄수익은닉 등 가상통화 관련 범죄를 엄정 단속하고, 가상통화 거래자금 환치기 실태조사를 한다. 필요시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추진한다. 또한 가상통화거래소 개인정보유출사건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가상통화 거래구조 등을 확인하고 위법행위 발견 시 엄단키로 했다.

둘째, 전문성이 없는 일반인 등이 가격 변동폭이 큰 가상통화 투자에 참여해 손실을 보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가상통화 거래소가 투기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을 차단하도록 했다.

셋째, 조속한 시일 내 입법조치를 거쳐 투자자 보호, 거래투명성 확보 조치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서는 가상통화 거래가 이뤄지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상통화 투기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바로잡아 나가되, 정부조치가 블록체인 등 기술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정책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노동

■ 개요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치러진 조기 대선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노사관계도 새로운 변화를 맞게 됐다.

‘노동존중 사회’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는 2020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2018년도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16.4% 인상한 7천530원으로 끌어올렸다. 또 박근혜 정부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인 ‘양대지침’을 폐기하는 등 노동계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 고용노동부 역사상 첫 여성 장관 취임

촉발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조각은 순조롭지 않았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첫 고용노동부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조대엽 고려대 교수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낙마했다. 조대엽 후보자는 지명 당시부터 청와대가 음주운전 경력이 있다고 밝혔으나 조 후보자가 이와 관련해 거짓 해명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교수 재직 당시 학생들에게 막말을 한 동영상도 공개되면서 자진사퇴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7월 23일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노동시간 단축과 비정규직 축소 등 노동 분야의